



# 미군 운영비, 이제 그만 주자!

**우리국민 혈세가 주한미군 FREE MONEY?  
우리가 준 돈을 흥청망청 쓰다가 딱 걸려!**

주한미군이 의정부시에 위치한 캠프 레드 클라우드 안에 있는 단층짜리 미2사단 기념관을 평택 미군기지로 옮기면서 **116억원을 들여 초호화판 기념관**으로 신축하며 돈을 낭비하고 있다고 미국 상원이 지적하였습니다. 평택 미군기지에 미군주둔비 부담금(방위비분담금)으로 **50억원짜리 빵공장**을 신축하려다 역시 미 상원에서 지적당하고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주한미군이 우리 국민 혈세인 미군주둔비부담금을 제멋대로 쓰는데도 한국 정부는 이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군 운영비 줘야하나?  
원래 미국이 내야 할 돈! 우리가 줄 이유 없어**

한미SOFA는 한국이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제2조)하는 대신 미국은 모든 주한미군 운영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미SOFA 제5조 1항: “합중국은……대한민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합중국 군대의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한다.”

미국의 협박과 강요로 1991년부터 시작된 미군주둔비부담(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은 한미SOFA 제5조 1항을 정지시키고 한국에 주한미군 운영비의 일부를 떠넘겨 부담토록 한 불법부당한 협정입니다. 특별협정으로 미군 운영비를 지원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뿐입니다.

**8차 미군주둔비부담 특별협정이 2013년 말에 완료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협정을 맺지 않으면 주한미군 운영비를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과의 미군주둔비부담 협상을 중단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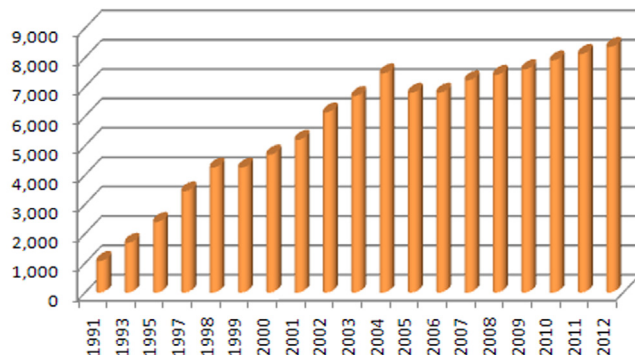
## 미군 주둔 위해서는 어느 정도 부담은 불가피?

- 대북 방어 벗어난 미군 위해 기지 무료 제공에 운영비까지 줄 필요 없어!
- 국방비 증액 압박, 전력증강·병사처우 개선 걸림돌

우리가 미군에게 시설과 구역을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주한미군이 북한의 침략을 막아준다는 명분 때문이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 그러나 현재의 주한미군은 더이상 불박이 군대가 아니라 이라크 등 분쟁지역에 파견되는 신속기동군(‘전략적 유연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이유가 없어졌으며, 미군운영비까지 부담할 이유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1991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 국방비가 4.6배 늘어나는 동안 우리가 주한미군에게 주는 미군주둔비부담금은 8.1배나 상승하여 국방비 증액을 압박해왔습니다. 같은 기간 미군주둔비부담금 총액은 12조원으로, 주한미군 장비가치 92억 달러를 넘어섭니다. 또 2013년도 미군주둔비부담금 8,695억원은 우리 군의 전력증강비 9조 8,938억원의 8.8%나 됩니다. 미군 지원하느라 우리 군의 전력증강이 방해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국군 병사 44만명의 급여를 50%나 올려줄 수 있는 막대한 금액이 미군주둔비부담금으로 빠져나가 병사 처우 개선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군주둔비  
부담금  
증가 추이  
(단위 :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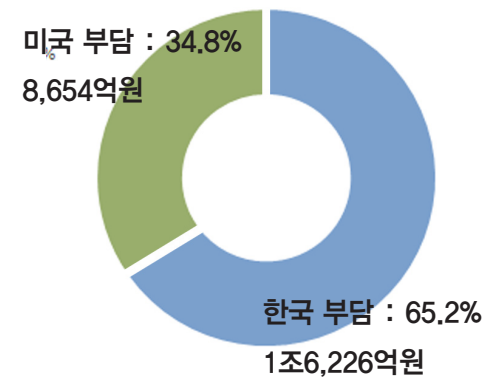
## 미군운영비 50%를 부담해야 ‘공평한 부담’ 이라고요?

- ‘한국이 40~45% 부담’한다는 주장은 미국의 ‘고무줄 잣대’!
- 우리는 이미 65%나 부담하고 있어!
- 1993년에 미 국방장관은 한국이 78%를 부담하고 있다며 미국 동맹국 중 최대라고 칭찬(?)한 바도 있어!

미국은 한국이 주한미군 운영비의 40~45% 밖에 부담하지 않아 불공평하다면서 50%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가 미군에게 주는 미군주둔비 부담금만 따진 것으로, 나머지 직·간접 지원비를 합치면 한국은 이미 6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50% 부담 요구는 미국이 한국의 지원을 제멋대로 평가하는 ‘고무줄 잣대’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방위비분담’이라는 용어도 한국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는 생각을 한국민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부당한 표현으로, ‘미군주둔비 부담’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 미군 운영비 한미 분담율



### 한국 부담 직·간접 지원비 (2009년 기준)

직접지원비 (미군주둔비 등)	8,365억원
간접지원비 (토지임대료 평가 등)	7,861억원
계	1조 6,226억원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 이전비용(약 19조원),  
환경오염 치유비용(약 10조원)도  
별도의 예산으로 한국이 대부분 부담.